

# ● 권력에 대한 단상

김동택 - 성균관대학교 교수

‘사회과학의 근본개념’인 권력power은 ‘의도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힘’ (러셀 Russel), ‘사회적 관계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베버 Max Weber), ‘A가 B로 하여금 권력의 작용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도록 만들 때 A는 B에 대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다알 R. Dahl)고 정의된다.

홉스나 로크와 같은 계약론자들은 정치 권력이 자발적으로 양도된 개인 주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지만, 일단 형성된 정치권력은 그 자체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라도 강제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권력이 타인에 대한 강제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강제를 당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권력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한 한국에서 권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마찬가지로 강한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정치 권력은 제도화된 국가 권력을 함의하게 되었다. 정의상 권력은 둘 이상의 사람이 모인 곳에 존재하게 되지만, 오늘날 권력이 가장 단단하게 응축된 범위는 무엇보다도 국가일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란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상이며, 주권이란 이름하에 행사되는 국가권력이며,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권력이며,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국제정치는 흔히 주권 국가들의 행위에 의해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권력은 정치

나 국가권력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나 특정한 제도들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지고 보면 가족이나 회사와 같은 인간 집단이라면 모두 권력을 매개로 한 정치현상이 늘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권력을 의미할 때, 늘 국가가 중심이 되는 상황이야말로 역사적으로 특이한 근대의 모습인 것이다. 사실 국가야말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의 권력을 가장 잘 실현한 역사적 구성물이며, 그런 점에서 국가는 전형적인 근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국가 아닌 다른 정치체를 상상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근대사회는 국가를 매개로 한 역설로 가득차 있다. 가장 근대적인 제도인 국가권력은 바로 그것을 창출해 낸 근대적 이념들로부터 늘 부정되어 왔다. 근대 이념의 한 축인 자유주의는 개인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을 강조해 왔고 반면 국가는 필요악으로 규정되어 왔다. 근대 이념의 다른 한 축인 사회주의 또한 국가를 소멸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근대 이념들은 제도화 과정을 통해 국가를 매우 정교하게 발전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통해 스스로의 이념을 확장시켜 왔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몇 세기는 국가 또는 국민국가의 시대였고 닥쳐올 21세기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듯하다. 낱아빠진 자유시장 이념이 복원된 것처럼 보이는 신자유주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그 이념을 지탱해 주는 것은 정교하게 발전된 국가권력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자본 이동의 자유, 노동력에 대한 통제, 상품과 금융의 가치와 흐름에 대한 국가권력의 복잡하고도 세밀한 조절 기제가 없다면 하루도 편안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세계화된 지구의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주의 체제도 본래의 이념인 국가 소멸을 주장하는 대신 정교한 국가권력장치를 발전시켜 왔다. 국가가 소멸될 미래 사회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에 의한 계획 경제와 억압이 정당화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 권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국가에 기대는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적 세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권력, 국가권력과 관련된 저작들은 그것에 대한 애증병존의 복잡한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서구의 근대화 이론, 체제 이론, 구조기능주의 이론이나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이론들에서 생산된, 권력

와 반대, 우려와 민주적 통제, 나아가 의도적인 무관심은 국가 권력의 물신화에 기여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 권력이 극성을 부리던 시대에 유럽 대륙의 한쪽에서 근대적 권력에 대한 비판이 시도되었고 점차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흔히 탈근대적 시각이라 불리는 이 시도들은 권력에 대한 기존 담론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탈근대적 시각의 대표자로 알려진 푸코가 '권력의 사상가'로 불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탈근대적 논리들은 질병, 성성, 감옥, 병원 등 인간의 일상적 삶에 관계된 제도들을 통해 권력에 대한 중심성(아마도 국가중심성)을 부정하면서 권력은 어디서나 존재함을 역설함과 동시에 권력의 일방적 억압성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권력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권력 생성론을 주장한다. 앞의 지적이 기존 권력론에 대한 비판이라면 뒤의 것은 대안적 권력의 모색을 함의하고 있다. 우리는 탈근대적 시각에 입각한 권력에 대한 논의를 최근 붓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긴 도서목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탈근대론의 문제제기는 이중적인 함의를 갖는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이 단순한 억압기제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시적인 일상에 개입하여 권력을 행사한다는 지적, 즉 보다 세밀한 권력의 작동방식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와는 전혀 문제의식이 다른, 국가권력과 상관 없이 도처에 존재하는 권력의 작동망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탈근대적 권력론은 국가권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부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온갖 종류의 권력들과 그것들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둘 사이의 관련성이다.

서구 세계가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해 온 권력에 관한 주제와 그것의 변형은 한국 사회에서 지난 20년간에 걸쳐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의 민주화과정에서 억압적인 국가 권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1990년대에 들어와 탈근대적 문제 제기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푸코의 표현대로 에피스테메적 전환인지 단순한 지적 유희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앞서 지적했듯이 국가권력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권력의 작동방식은 점차 세밀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탈근대적 담론에서는 국가권력의 작동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보다는 그것과 상관 없는 권력들에 더 많은 주목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인류의 가능한 대안적 생존방식, 또 그것을 구성할 새로운 권력에 대한 논의를 찾아 보기 힘들다. 하지만 '미시권력', '일상권력', '문화권력', '우리 안의 파시즘'이 논의되는 동일한 시간에 지구상의 특정 공간에서는 거대한 국가권력(들)이 각기 정의로운(?) 전쟁을 주장하면서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역사적 유물로 치부되는 국가권력이 지금 일상성이 머무는 삶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홉스봄은 최근 발간된 저서에서 포스트모던한 역사인식을 인정하면서도

독일, 일본, 소련, 미국이 행했던 수많은 범죄들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며, 역사학은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파시즘을 미학적 관점, 미시적인 관점에서 정의할 수는 있겠지만 파시즘이 수많은 일상성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자본주의와 더불어 근대의 핵심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인 국가권력에 대한 분석, 비판, 대안을 접어둔다면 탈근대론의 문제의식은 많은 부분 그 의미가 상실될 것이다. 일상성, 문화, 환경,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여전히 국가권력의 함수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한**

자본주의와 더불어 근대의 핵심적인  
제도가운데 하나인 국가권력에 대한  
분석, 비판, 대안을 접어둔다면  
탈근대론의 문제의식은 많은 부분 그  
의미가 상실될 것이다. 일상성, 문화,  
환경,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여전히 국가권력의 함수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